

### 우리사회 관례·법·제도에 대한 국민생각

#### ■ 우리사회 문화와 관례 평가

- \_ 국민들, 전반적으로 우리사회 문화·관례에 부정적
- \_ 20대 문화·관례 ‘유지’ 의견 높고, 30대 ‘폐지’ 의견 높아
- \_ 4060세대, 2030세대보다 문화·관례 ‘폐지’ 의견 뚜렷
- \_ 이념성향 차이 없이 문화·관례 ‘폐지’ 의견 높아

#### ■ 학교, 직장 관련 법·제도 평가

- \_ 국민들, 학교·직장 관련 법·제도 ‘유지’ 의견 많아
- \_ 2030세대, 학교·직장 관련 법·제도 유지 의견
- \_ 4060세대, 연령 높을수록 부정적 법·제도 많아
- \_ 보수층 ‘친기업’ vs 진보층 ‘친노동자’ 양상

#### ■ 사회 관련 법·제도 평가

- \_ 국민전체, 사회 관련 법·제도에 긍정적
- \_ 2030세대, 전반적으로 사회 관련 법·제도 긍정 평가
- \_ 4060세대 모두 사회 관련 법·제도에 긍정적
- \_ 보수·중도·진보층 모두 사회 관련 법·제도 긍정 평가

#### ■ 정치, 정부 관련 법·제도 평가

- \_ 국민들, 정치·정부 관련 법·제도에 긍정/부정평가 갈려
- \_ 2030세대, 남녀 간 의견 매우 달라
- \_ 4060세대, 60대 이상이 가장 부정적
- \_ 보수·중도층 ‘여성가족부’ 폐지 vs 진보층 유지

##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7월 1일(금) ~ 7월 3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6\%$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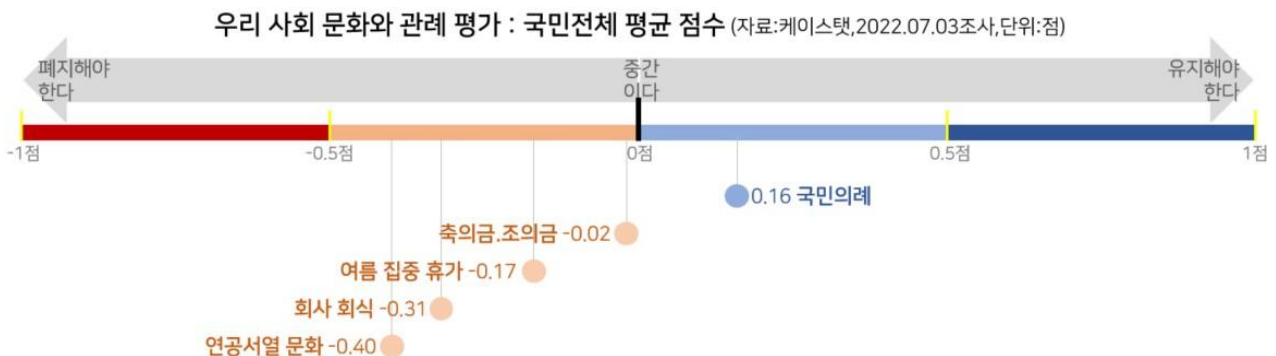
##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 우리사회 문화와 관례 평가

### □ 국민들, 전반적으로 우리사회 문화·관례에 부정적

-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례에 대한 국민들 생각을 질문한 결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민의례’(0.16점) 하나에 그침
  - “다음은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습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문화와 관습을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함
  - 보기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가급적 폐지해야 한다’, ‘중간이다’, ‘가급적 유지해야 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등 5개를 제시함
  - 각 응답에 대한 점수화 처리는 다음과 같음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가급적 폐지해야 한다’ : -1점 / ‘중간이다’ : 0점 / ‘가급적 유지해야 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 +1점
- ‘폐지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은 문화·관례는 ‘연공서열 문화’가 -0.40점으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회사 회식’(-0.31점), ‘여름 집중 휴가’(-0.17점), ‘축의금, 조의금’(-0.02점)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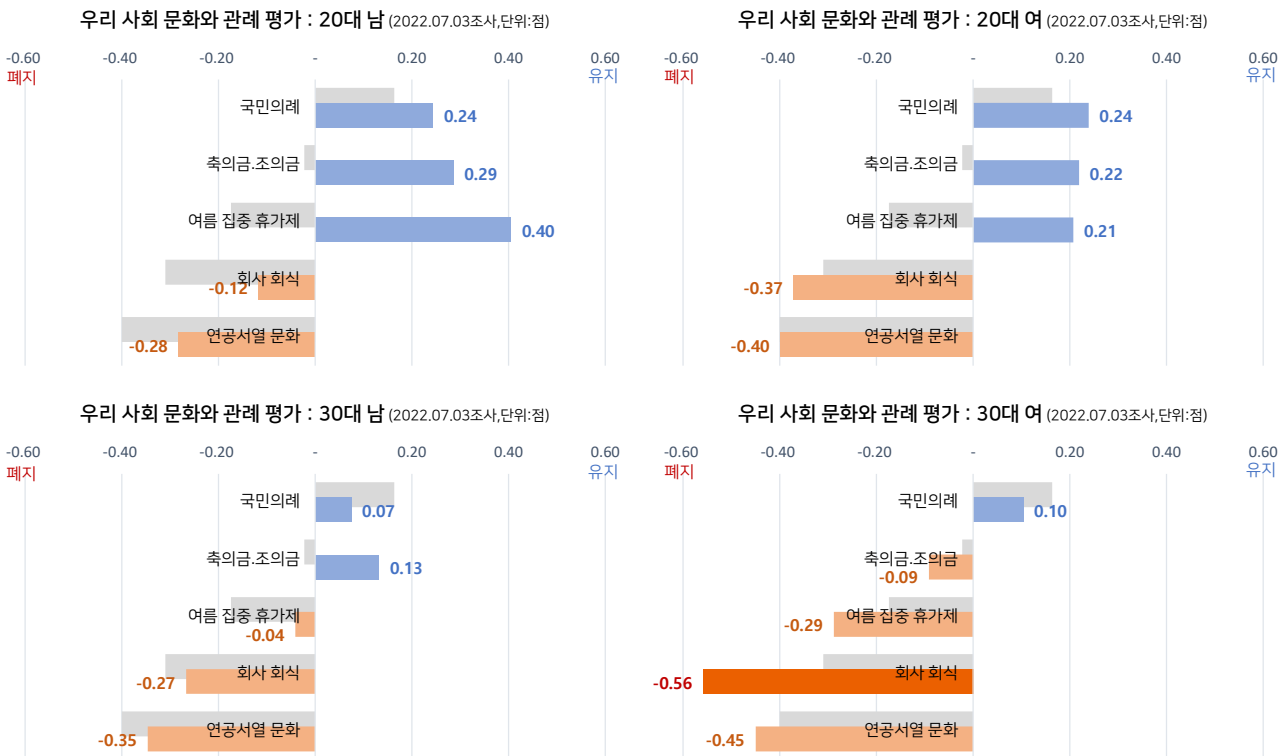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의 ‘관례·법·제도’는 ‘생성 → 유지 → 소멸’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민 여론임
  - : 어떤 ‘관례·법·제도’는 생성된 이후 빠르게 소멸되고, 어떤 ‘관례·법·제도’는 오래도록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해당 ‘관례·법·제도’에 대한 국민평가에서 비롯됨
- ☑ 이번 케이스탯 조사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다양한 ‘관례·법·제도’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항목들에 대한 국민생각을 살펴보고자 기획됨
  - : 총 30개 항목을 선정했으며, 범주별로는 ‘사회 문화와 관례’(5개), ‘학교, 직장 관련 법·제도’(10개), ‘사회 관련 법·제도’(10개), ‘정치, 정부 관련 법·제도’(5개) 등임
- ☑ 먼저 ‘우리사회 문화와 관례’에 대한 국민생각은 전반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임
  - : 총 5개 중 ‘국민의례’만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다른 4개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함
  - : ‘폐지해야 한다’는 문화·관례는 그 생명력이 다했다는 의미인데, 특히 나이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연공서열 문화’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됨

## □ 20대 문화·관례 '유지' 의견 높고, 30대 '폐지' 의견 높아

- 우리사회 문화와 관례에 대한 평가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의 경우 20대와 30대의 생각이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남
- 20대는 지금의 문화·관례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고 30대는 부정적임
  - 20대는 '국민의례', '축의금, 조의금', '여름 집중 휴가제'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에 비해 30대는 '국민의례' 유지에 동의하지만 '여름 집중 휴가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축의금, 조의금'에 대해 남자 30대는 유지, 여자 30대는 폐지로 의견이 엇갈림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며, '0점'(중간이다)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푸른색 계열 막대, 낮으면 붉은색 계열 막대로 표시함
- 또한 +0.5점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막대, -0.5점보다 낮으면 짙은 붉은색 막대로 차이를 둠
- 2030세대가 의견을 같이하는 문화·관례는 '회사 회식'과 '연공서열 문화'로, 폐지 의견에 일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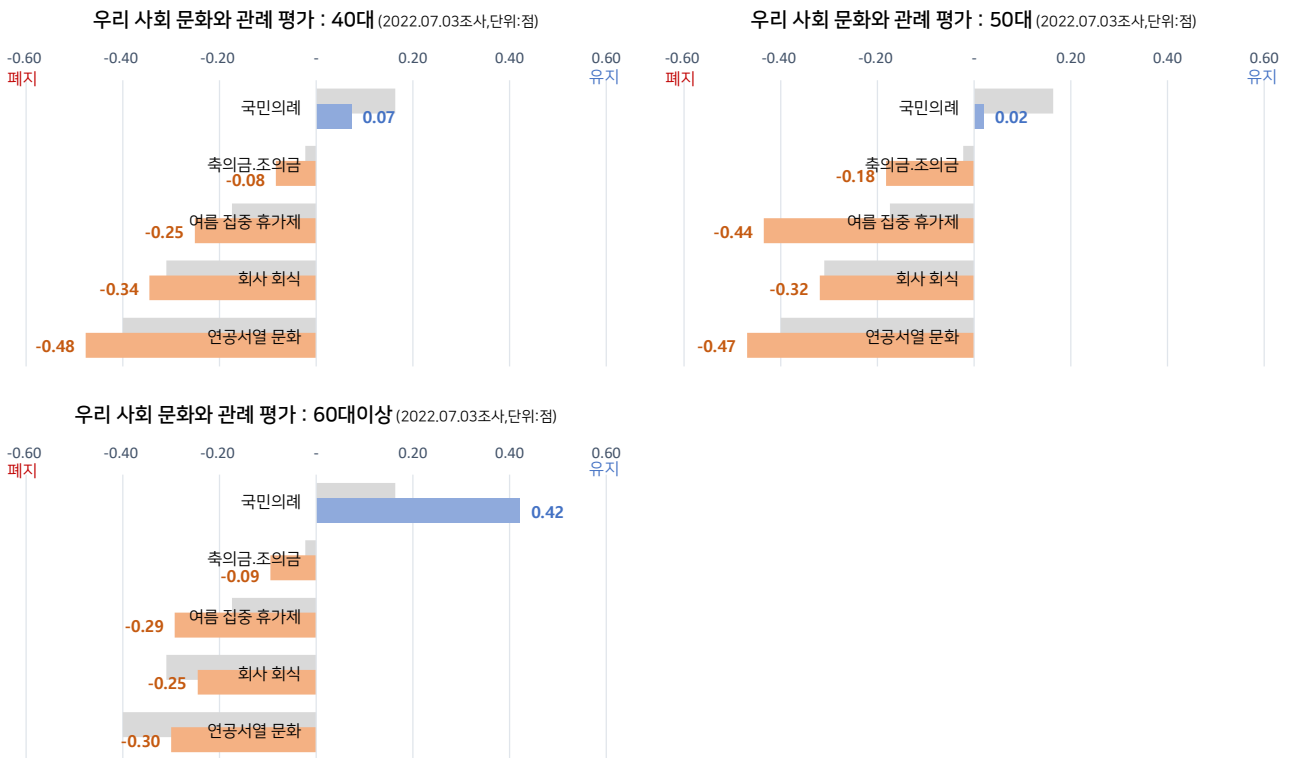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일반적으로 지금의 사회 제도를 만들어낸 기성세대는 현행 사회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제도에 '타율적'으로 진입한 젊은세대는 비판적이라고 말해짐
  - : 2030세대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회사 회식'과 '연공서열 문화'에 폐지 의견을 말하는 것이 그 예임
- ☑ 그러나 한국의 20대는 이러한 일반적인 서술에서 다소 비껴나, 30대보다 현행 문화·관례에 긍정적임
  - : 20대는 30대와 달리 '축의금, 조의금', '여름 집중 휴가제' 등을 인정하면서 이른바 '20대 보수화' 모습을 드러냄
  - : 여기서 말하는 '보수화'는 '정치적 보수화'가 아닌 사회에 대한 태도로서의 '보수화'임
  - : 다만, '남성중심 문화·제도'에 대한 20대 남녀 간 인식 차이가 크고, 여자 20대의 비판적 모습이 강력해 '20대 보수화' 모습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4060세대, 2030세대 보다 문화·관례 ‘폐지’ 의견 뚜렷

- 4060세대의 사회 문화·관례에 대한 생각은 전반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고, 강도 면에서도 2030세대 보다 높음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며, ‘0점’(중간이다)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푸른색 계열 막대, 낮으면 붉은색 계열 막대로 표시함
- 4060세대 모두 ‘국민의례’는 유지, 나머지 문화·관례는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함
  - 4050대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높고, 60대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음
- 한편,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의례’에 대한 점수는 60대이상이 가장 높고, 4050세대는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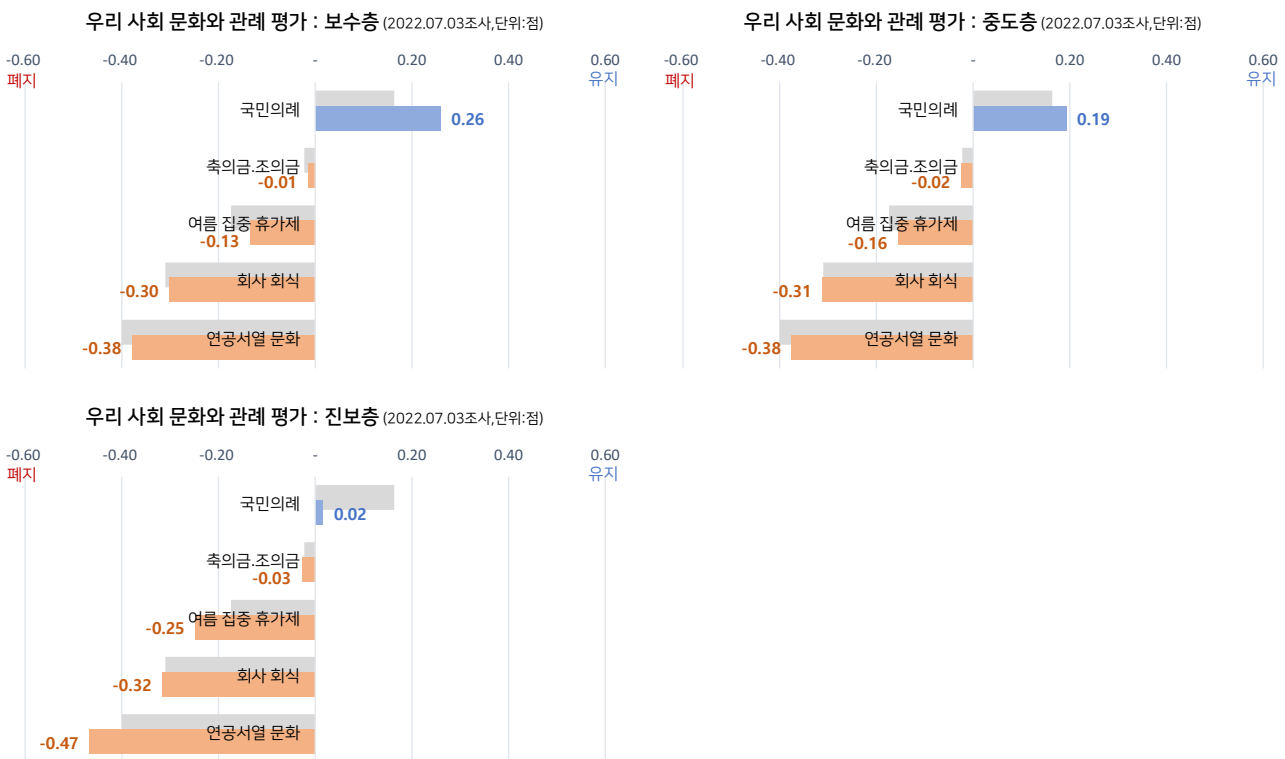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기성세대는 현행 사회 제도를 옹호한다고 일컬어지는데, 우리사회 문화·관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모습임
  - : 4060세대는 2030세대 보다 더욱 현행 문화·관례에 부정적임
  - : 특히 ‘축의금, 조의금’, ‘여름 집중 휴가제’를 인정하는 20대와 비교하면 그 부정적 태도가 더욱 두드러짐
  - : 이는 4060세대가 문화·관례를 만들고 유지한 것은 맞지만, 시대 변화를 인정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으로 보임
- ☑ 이에 비해 2030세대, 특히 20대가 ‘유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은 이들 세대의 ‘경험’ 때문으로 분석됨
  - : 이른바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는 말처럼 2030세대(특히 20대)는 4060세대와 달리 ‘고속성장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오로지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는 세대임
  - : 현재에 대한 어려움은 과거를 동경하게 만들고(복고문화 유행), 변화보다 유지를 선택하게 만들(사회적 보수화)

## □ 이념성향 차이 없이 문화·관례 '폐지' 의견 높아

- 우리사회 문화·관례에 대한 생각을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중도·진보층 모두 비슷한 점수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균이며, '0점'(중간이다)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푸른색 계열 막대, 낮으면 붉은색 계열 막대로 표시함
- 이념성향별 모두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국민의례'는 보수층의 유지의견이 높고(0.26점), 진보층은 낮음(0.02점)
  - 중도층은 0.19점으로 보수층과 진보층 중간에 위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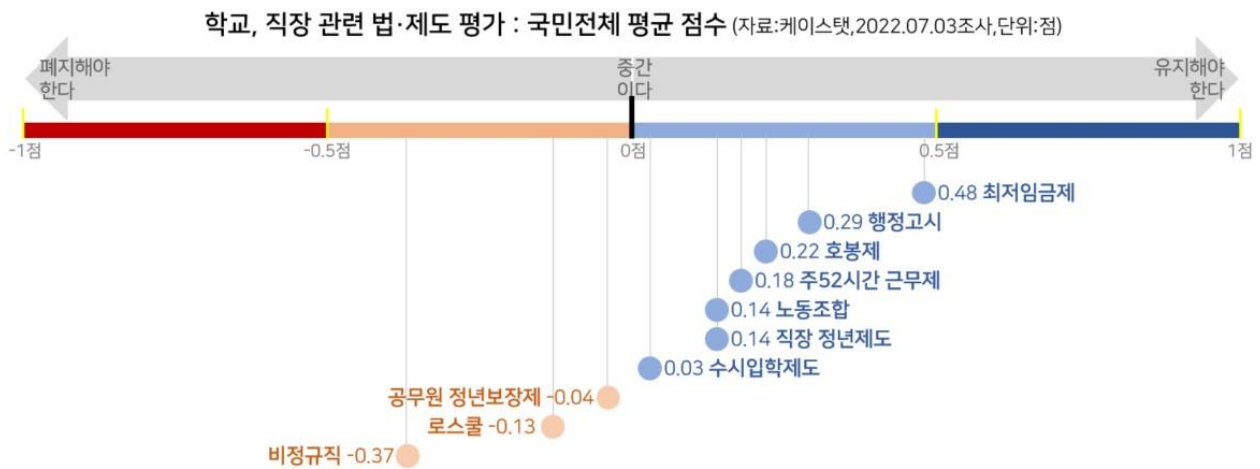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주관적 이념성향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문화·관례를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함
  - : 보수·중도·진보층 모두 '국민의례'는 유지되어야 하고, '연공서열 문화' 등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 : 특히 폐지해야 한다는 4개 항목에 대한 점수가 대체로 비슷할 정도로 생각이 유사함
- ☑️ 다만, '국민의례'에 대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동일하면서도 이념성향별로 비교적 점수 차이가 있음

## 학교, 직장 관련 법·제도 평가

### 국민들, 학교·직장 관련 법·제도 '유지' 의견 많아

- 학교, 직장 관련 법·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유지 의견이 가장 높은 제도는 '최저임금제'(0.48점)로 조사됨
  - "다음은 학교와 직장 관련 제도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각각의 제도가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함
  - 보기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가급적 폐지해야 한다', '중간이다', '가급적 유지해야 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등 5개를 제시함
  - 각 응답에 대한 점수화 처리는 다음과 같음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가급적 폐지해야 한다' : -1점 / '중간이다' : 0점 / '가급적 유지해야 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 +1점
- 다음으로 '행정고시'(0.29점), '호봉제'(0.22점), '주52시간 근무제'(0.18점) 순으로 응답함
-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법·제도는 '비정규직'(-0.37점)이었고, 다음으로 '로스쿨'(-0.13점), '공무원 정년보장제'(-0.04점)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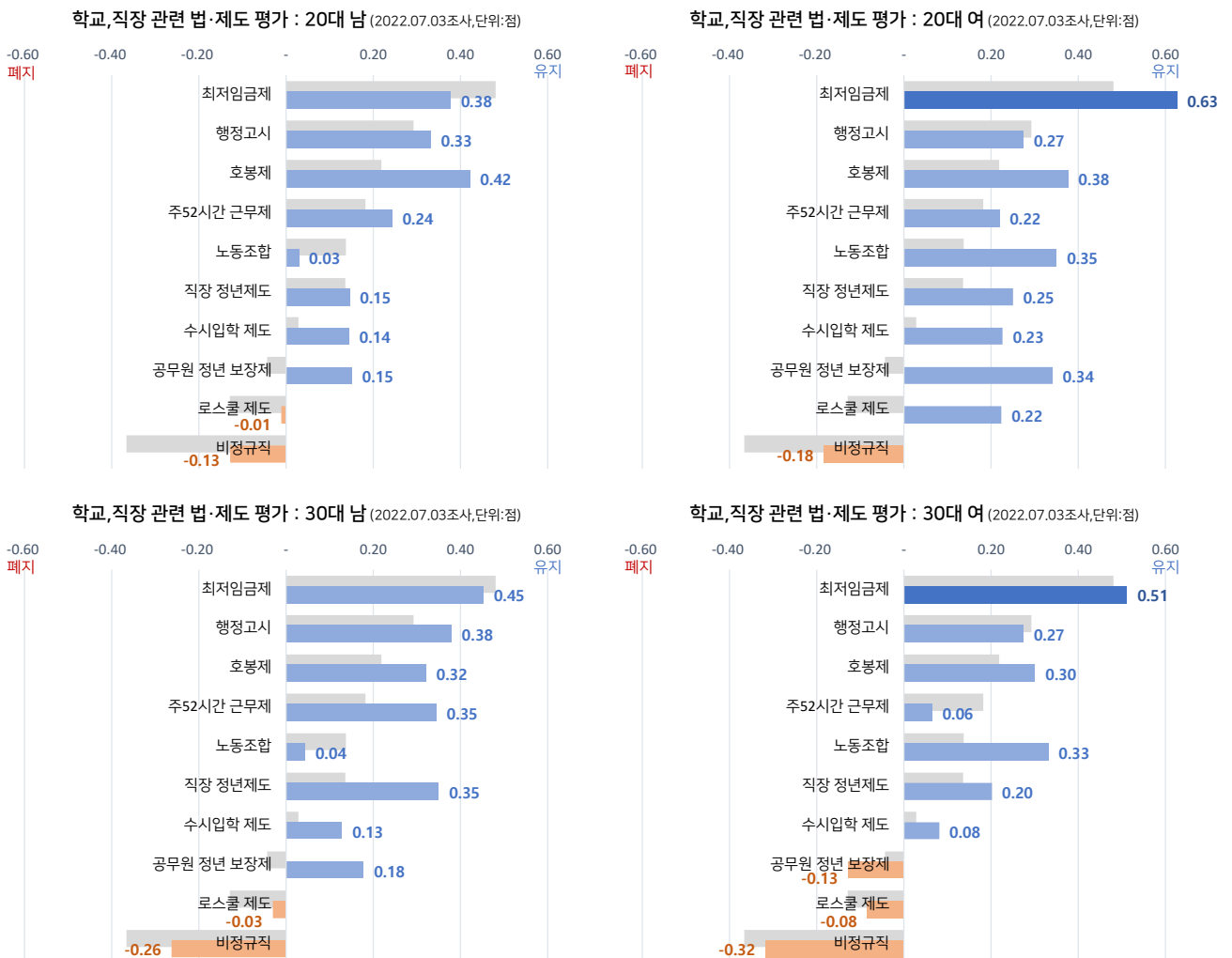


#### Kstat Point

- ☑ 학교, 직장 관련 법·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해마다 최저임금제 결정을 둘러싸고 언론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제 유지·폐지 논란이 반복되지만, 국민들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명함
- ☑ 한편, 윤석열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에 대해 '친기업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 나타난 국민여론은 윤석열 정부 생각과 다른 양상임  
 : '친기업' 경제·노동정책의 핵심은 '노동유연성' 강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노동조합'의 권한은 축소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은 확대되어야 함  
 : 이에 대해 국민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노동조합'은 유지해야 하고, '비정규직'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임
- ☑ 향후 윤석열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각각의 법·제도가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국민여론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됨

## □ 2030세대, 학교·직장 관련 법·제도 유지 의견

- 학교, 직장 관련 법·제도에 대해 2030세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수시입학제도’ 등에 대해 유지의견이 높음
- 2030세대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제도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며, ‘0점’(중간이다)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푸른색 계열 막대, 낮으면 붉은색 계열 막대로 표시함
  - 또한 +0.5점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막대, -0.5점보다 낮으면 짙은 붉은색 막대로 차이를 둠
- 한편,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여자 20대를 제외한 2030세대 모두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여자 30대는 ‘공무원 정년 보장제’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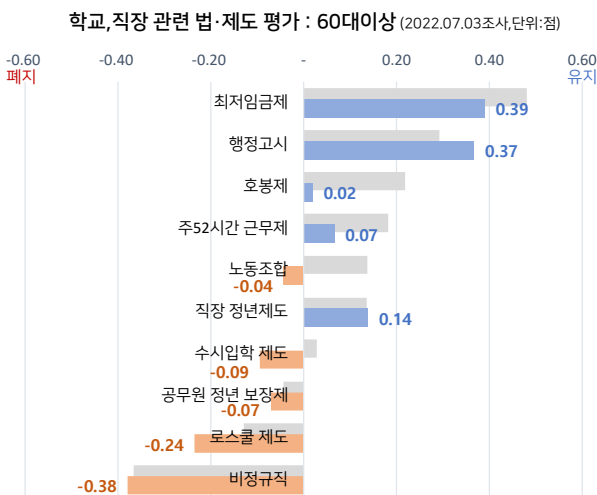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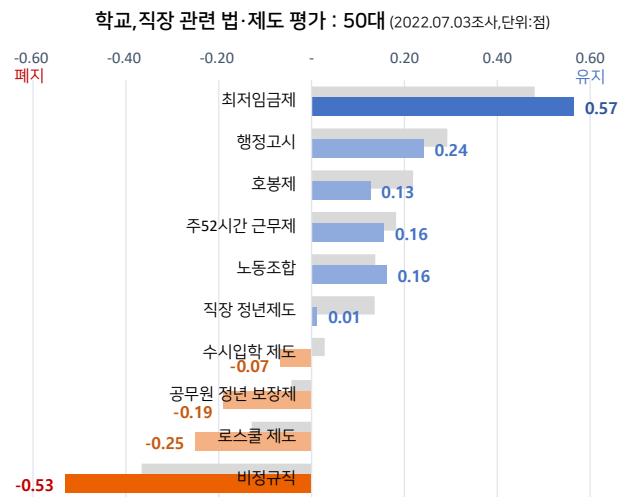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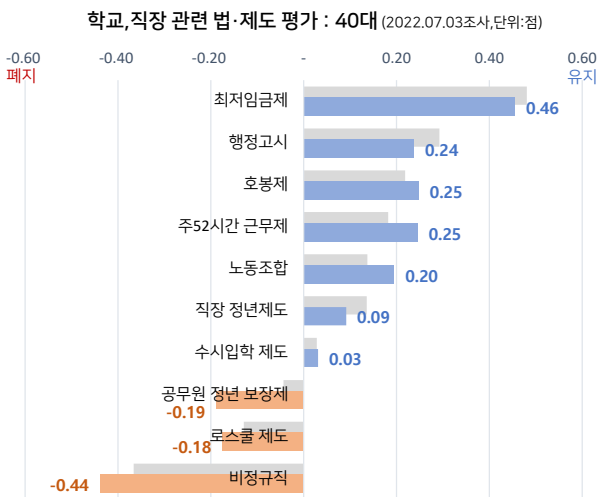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30세대는 학교, 직장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보임
  - : 2030세대가 중시하는 ‘공정’은 법·제도의 불공정한 운영에 대한 반발이지 법·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 □ 4060세대, 연령 높을수록 부정적 법·제도 많아

- 4060세대의 학교, 직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생각은 전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지만, 2030 세대에 비해 점수가 낮음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며, '0점'(중간이다)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푸른색 계열 막대, 낮으면 붉은색 계열 막대로 표시함
  - 또한 +0.5점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막대, -0.5점보다 낮으면 짙은 붉은색 막대로 차이를 둠
-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폐지해야 할 법·제도가 많아져, 40대는 3개, 50대는 4개, 60대 이상은 5개로 나 타남
  - 4060세대 모두가 공통적으로 폐지해야 할 법·제도로 꼽은 것은 '비정규직', '로스쿨 제도', '공무원 정년보장제' 등임
  - 여기에 50대는 '수시입학 제도'가 추가되고, 60대 이상은 '수시입학 제도'와 '노동조합'이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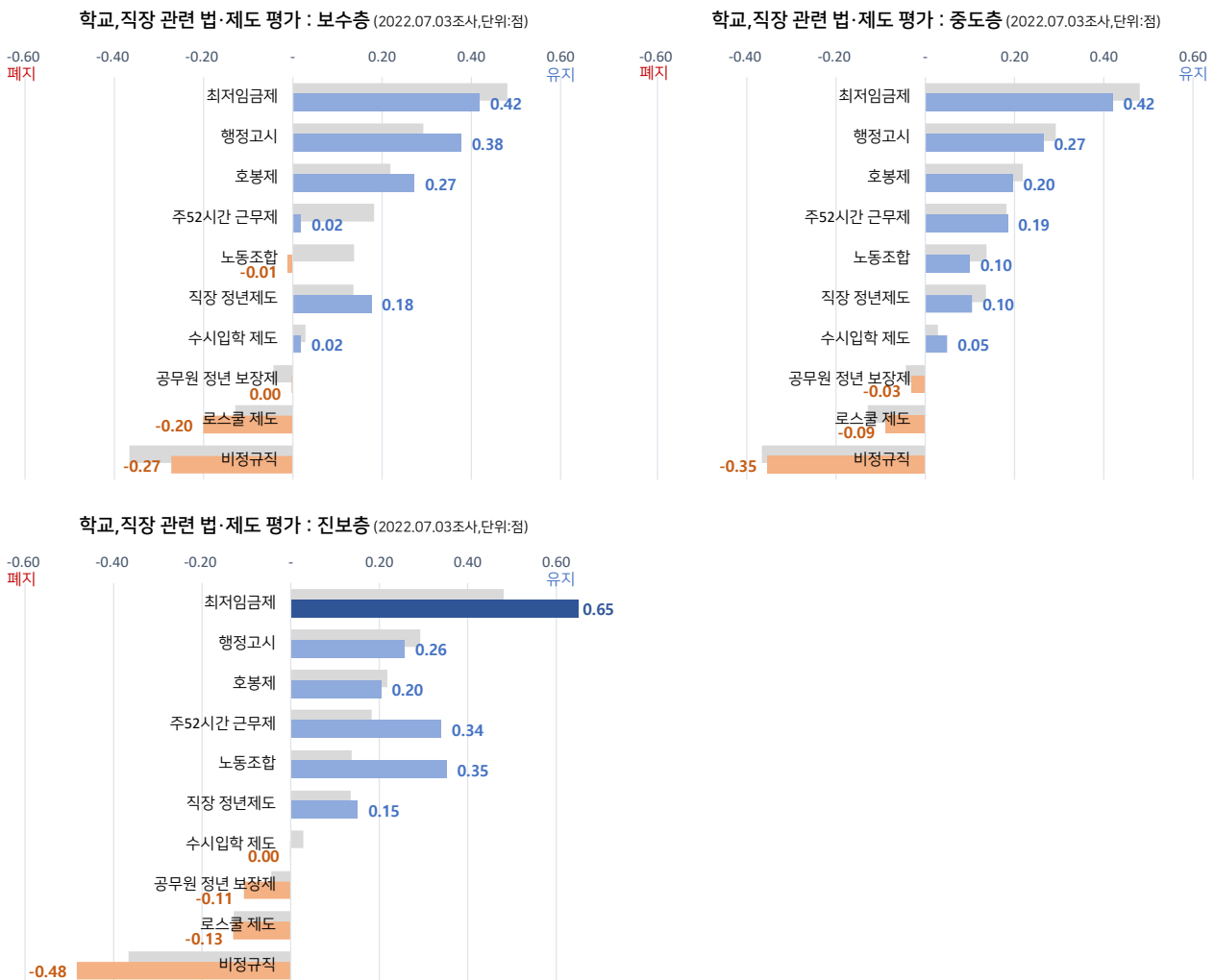


### Kstat Point

- ☑ 학교, 직장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도 2030세대는 유지의견이 많고, 4060세대는 상대적으로 폐지의견이 많음 : 4060세대는 지금의 법·제도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기성세대라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임
- ☑ 한편으로 '로스쿨' 등 법·제도화 이후 과실을 일부 기득권층이 독점하고 있다는 불만의 표현이라는 측면도 있음

## □ 보수층 '친기업' vs 진보층 '친노동자' 양상

- 학교, 직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의견을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은 '친기업' 모습을 보이고, 진보층은 '친노동자' 모습을 보임
-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보수층은 유지해야 한다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진보층은 높음
  - '비정규직'에 대해 보수층은 폐지해야 한다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진보층은 높음
  - 또한 '노동조합'에 대해 보수층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진보층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림
  - 중도층은 이들 모두의 항목에서 보수층과 진보층 중간에 위치하는 점수를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며, '0점'(중간이다)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푸른색 계열 막대, 낮으면 붉은색 계열 막대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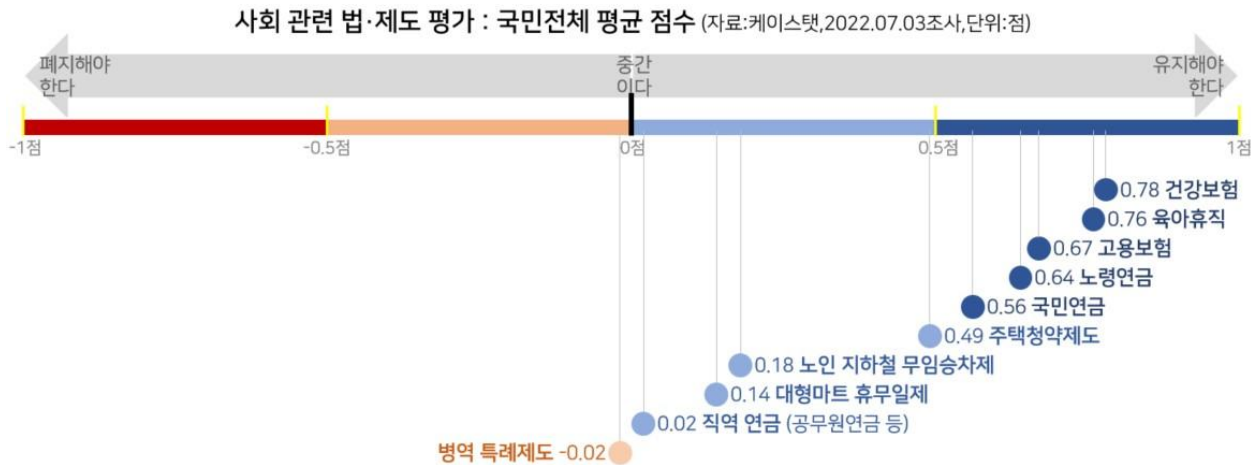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이념성향별 차이는 학교와 관련된 법·제도에서는 찾기 어렵고, 직장 관련 법·제도에서 확인됨 : 보수층은 친기업적이고, 진보층은 친노동자적 인식과 태도를 보임
- ☑ 다만, 이는 상대적 차이이고, 절대적으로는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유지/폐지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 사회 관련 법·제도 평가

### □ 국민전체, 사회 관련 법·제도에 긍정적

- 사회와 관련된 법·제도 대부분에 대해 국민들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유지 의견이 가장 높은 제도는 ‘건강보험’(0.78점)으로 나타남
  - “다음은 우리나라 법과 제도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각각의 제도가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함
  - 보기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가급적 폐지해야 한다’, ‘중간이다’, ‘가급적 유지해야 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등 5개를 제시함
  - 각 응답에 대한 점수화 처리는 다음과 같음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가급적 폐지해야 한다’ : -1점 / ‘중간이다’ : 0점 / ‘가급적 유지해야 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 +1점
- 다음으로 ‘육아휴직’(0.76점), ‘고용보험’(0.67점), ‘노령연금’(0.64점) 순으로 응답함
  - 유지 의견 법·제도 중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직역연금’(0.02점)이고, 다음은 ‘대형마트 휴무일제’(0.14점)였음
  - 참고로 ‘직역연금’이란 공무원, 학교 교직원, 군인, 우체국 직원 등 특정 직업군 연금제도를 말함
-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병역 특례제도’(-0.02점)가 유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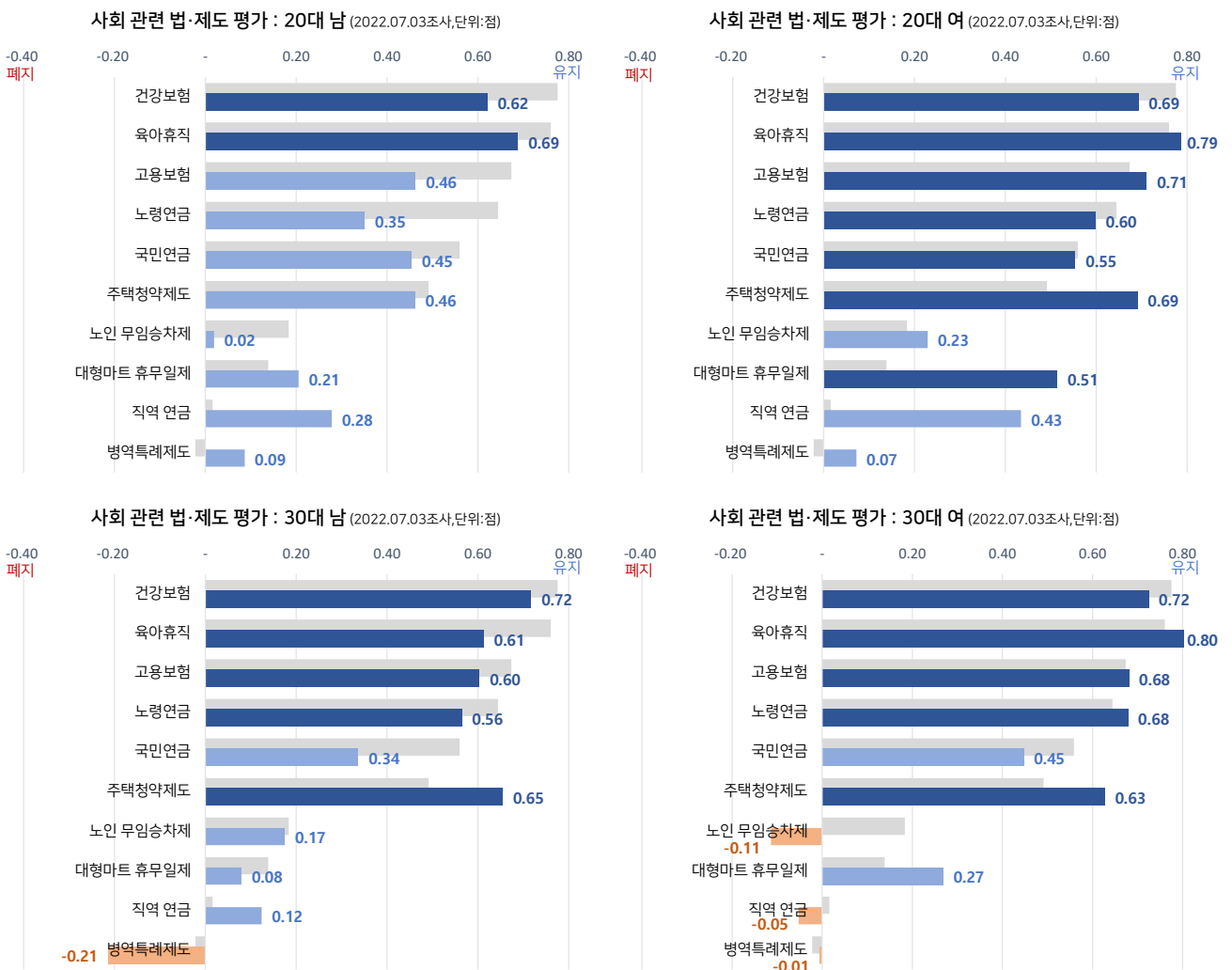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사회 관련 법·제도들 대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특히 보험과 연금에 대한 유지 의견이 매우 높음
  - :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0.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함
  - : 또한 ‘육아휴직’도 0.76점이라는 매우 높은 점수로 긍정적 평가를 받음
  - : 이들 대부분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확대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들로, 국민적 신뢰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
- ☑ 한편, ‘병역 특례제도’의 경우 근소하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 :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병역 특례제도’지만 최근 들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유지와 폐지 의견이 팽팽해진 것으로 분석됨

## □ 2030세대, 전반적으로 사회 관련 법·제도 긍정 평가

- 사회 관련 법·제도에 대해 2030세대는 전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특히 20대는 모든 법·제도에 대해 유지해야 한다는 긍정적 의견을 표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며, '0점'(중간이다)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푸른색 계열 막대, 낮으면 붉은색 계열 막대로 표시함
  - 또한 +0.5점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막대, -0.5점보다 낮으면 짙은 붉은색 막대로 차이를 둠
- 30대는 남자의 경우 '병역 특례제도'에 대해 폐지 의견을 제시했고, 여자는 '병역 특례제도'와 더불어 '직역 연금',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에 대해 폐지 의견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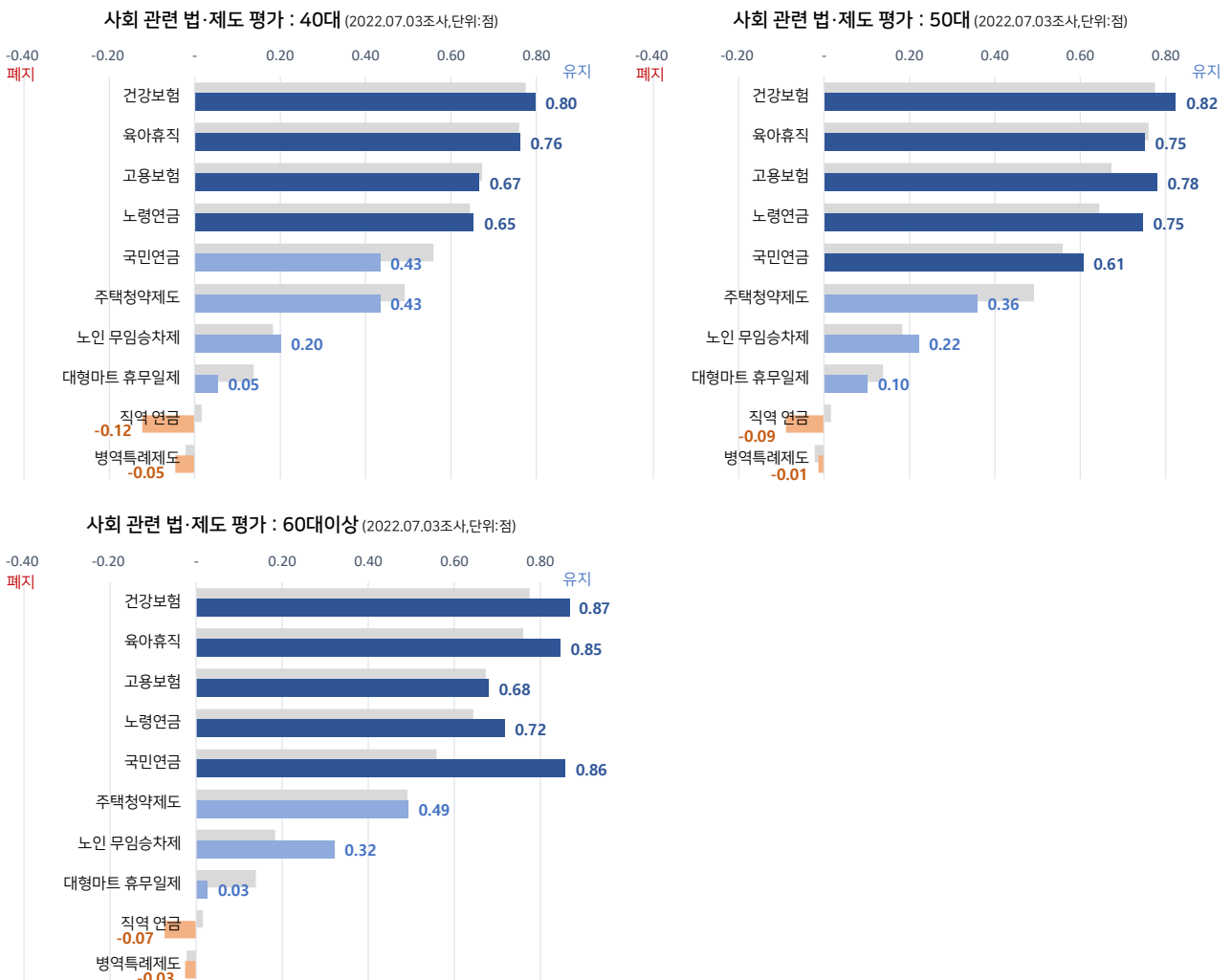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대는 앞서 우리사회 문화와 관례, 학교·직장 관련 법·제도에 이어 사회 관련 법·제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긍정적 태도를 보임
  - : 즉, 20대는 지금의 우리사회 시스템(관례·법·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수용하고 있음
- ☑ 이에 비해 30대는 20대보다 부정적이지만, 4060세대보다는 긍정적으로 우리사회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음

## □ 4060세대 모두 사회 관련 법·제도에 긍정적

- 4060세대의 사회 관련 법·제도에 대한 생각은 대체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며, '0점'(중간이다)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푸른색 계열 막대, 낮으면 붉은색 계열 막대로 표시함
  - 또한 +0.5점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막대, -0.5점보다 낮으면 짙은 붉은색 막대로 차이를 둠
- 4060세대 모두가 폐지 의견을 나타낸 법·제도는 '직역 연금'과 '병역 특례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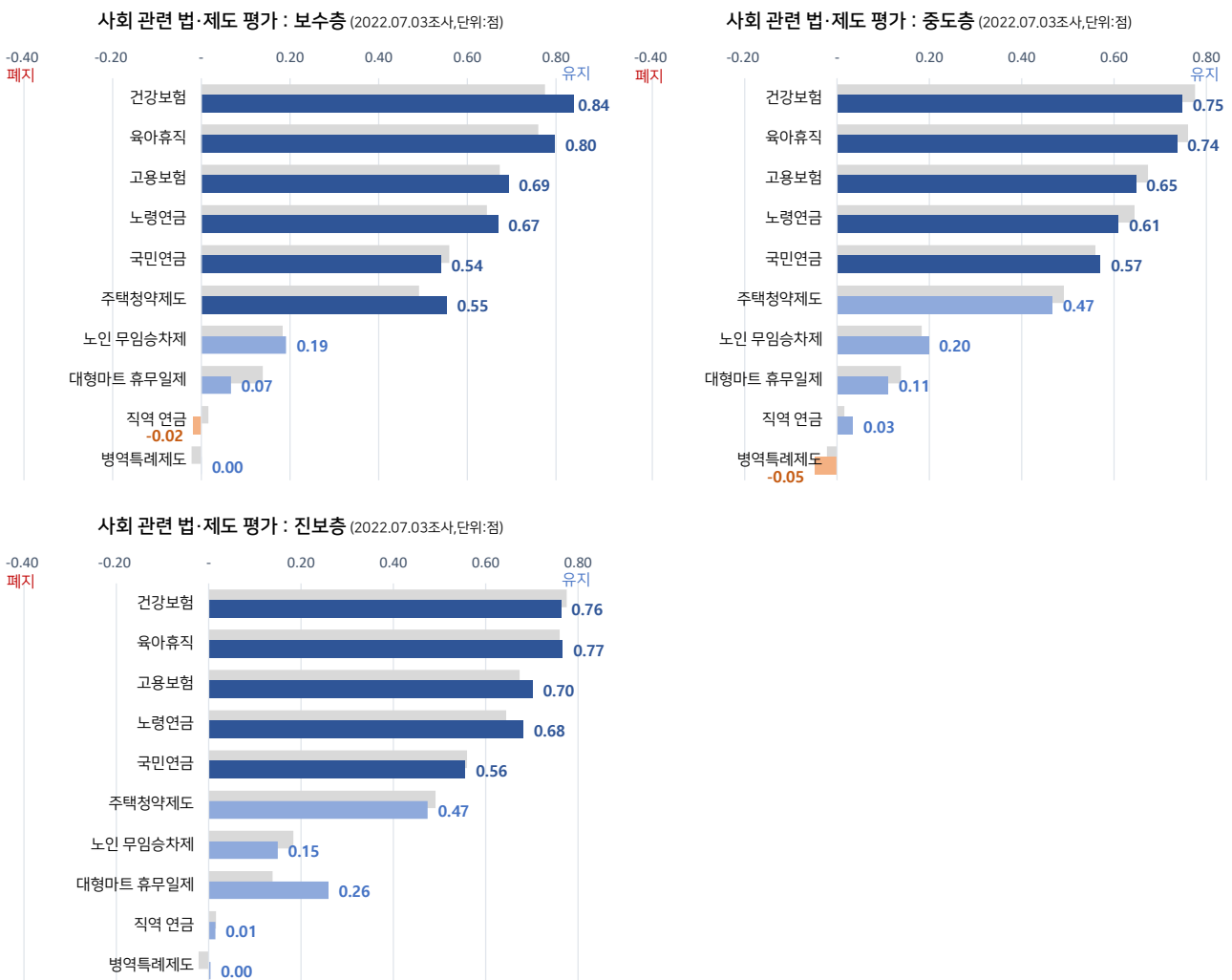


### Kstat Point

- ☑ 4060세대는 우리사회 문화와 관례, 그리고 학교·직장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사회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보임
  - : 특히 보험과 연금제도를 비롯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 확대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나타냄
- ☑ 한편, '직역 연금'과 '병역 특례제도'에 대해서는 4060세대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함
  - : 이는 일종의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로 보이며, 2030세대에 비해 4060세대가 오히려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심이 강한 측면이 있음을 보여줌

## □ 보수·중도·진보층 모두 사회 관련 법·제도 긍정 평가

- 사회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의견을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이념적 차이를 떠나 보수·중도·진보층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며, '0점'(중간이다)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푸른색 계열 막대, 낮으면 붉은색 계열 막대로 표시함
  - 또한 +0.5점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막대, -0.5점보다 낮으면 짙은 붉은색 막대로 차이를 둠
- 보수층은 '직역 연금'에 대해 부정적이고, 중도층은 '병역 특례제도'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그 수치가 낮고 차이가 거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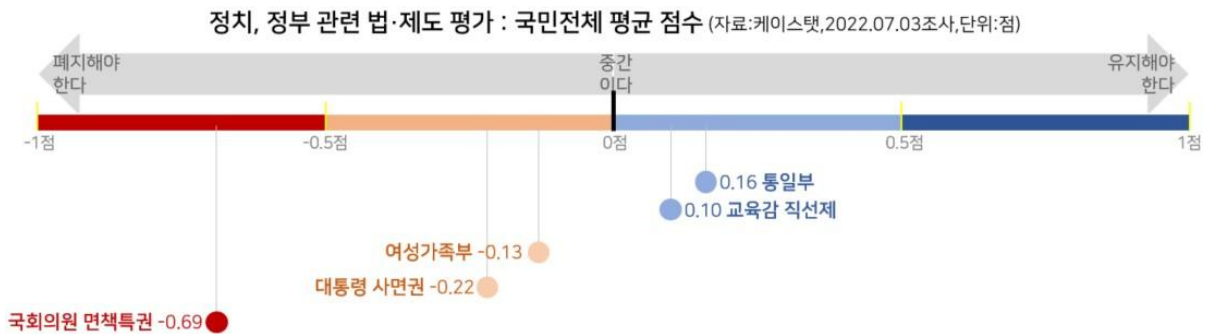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주관적 이념성향별 차이를 떠나 사회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함
  - : 복지제도 도입 초기에 벌어졌던 '성장 vs 분배' 논쟁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석됨
- ☑ 윤석열 정부 역시 복지제도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향후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 지난 7월 4일, 국민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병수당' 사업이 최초로 실시됨

## 정기, 정부 관련 법·제도 평가

### 국민들, 정치·정부 관련 법·제도에 긍정/부정평가 갈려

- 정치, 정부 관련 법·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법·제도별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다음은 또 다른 법과 제도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각 제도가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함
  - 보기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가급적 폐지해야 한다’, ‘중간이다’, ‘가급적 유지해야 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등 5개를 제시함
  - 각 응답에 대한 점수화 처리는 다음과 같음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가급적 폐지해야 한다’ : -1점 / ‘중간이다’ : 0점 / ‘가급적 유지해야 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 +1점
- 유지 의견을 나타낸 법·제도는 ‘통일부’(0.16점)와 ‘교육감 직선제’(0.10점) 두 개임
- 폐지 의견을 보인 법·제도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0.69점), ‘대통령 사면권’(-0.22점), ‘여성가족부’(-0.13점) 등 세 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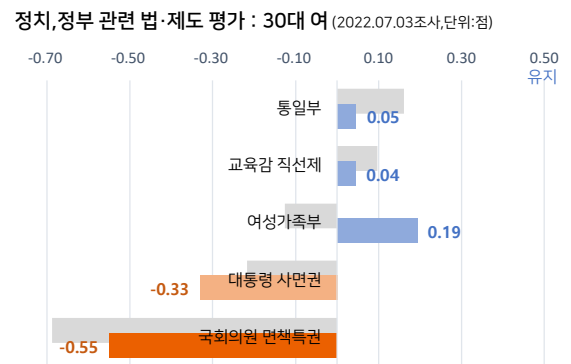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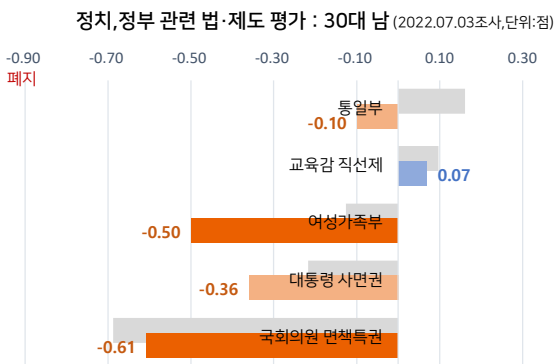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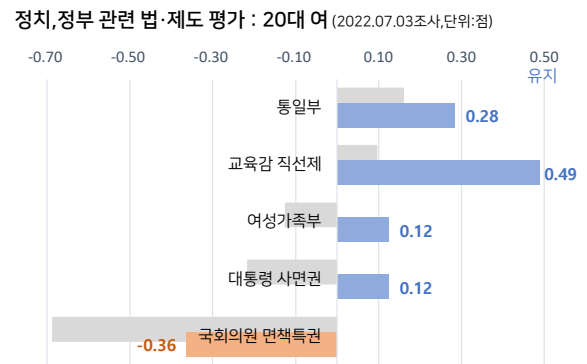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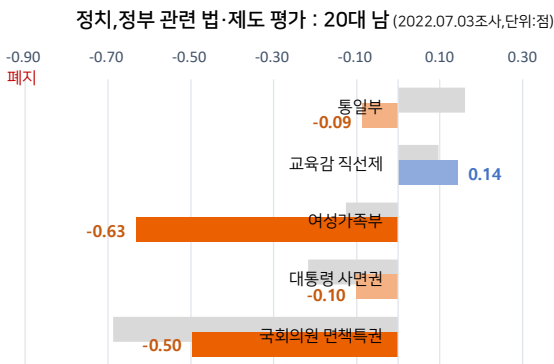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앞서의 각종 관례·법·제도에 비해 정치, 정부 관련 법·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냄  
 :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치, 정부에 대해서만큼은 비판적인 모습임
- ☑ 특히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데, 이는 현실 정치권 중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국민 중 56%는 국회의원이 ‘자기 자신 또는 소속된 정당을 위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지역) 또는 국민(주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의견은 33%임(자료, 케이스탯 리포트 40호 『‘선거’에 대한 국민의식 집중 분석』)
- ☑ 한편, 지난 대선 시기부터 존폐 논란이 뜨거운 ‘여성가족부’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남  
 : 윤석열 정부는 공약으로 밝혔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현실화 시킬 것으로 보여, 이번 조사결과만 놓고 보면 국민여론도 동의하는 양상임

## □ 2030세대, 남녀 간 의견 매우 달라

- 정치, 정부 관련 법·제도에 대한 2030세대 의견은 남녀별로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남
- 남자 2030세대는 ‘교육감 직선제’를 제외한 다른 법·제도에 모두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임
  - 특히 ‘여성가족부’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음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며, ‘0점’(중간이다)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푸른색 계열 막대, 낮으면 붉은색 계열 막대로 표시함
  - 또한 +0.5점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막대, -0.5점보다 낮으면 짙은 붉은색 막대로 차이를 둠
- 이에 비해 여자 2030세대는 전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여자 20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외한 다른 법·제도에 대해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 여자 30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대통령 사면권’은 폐지해야 하고, 다른 법·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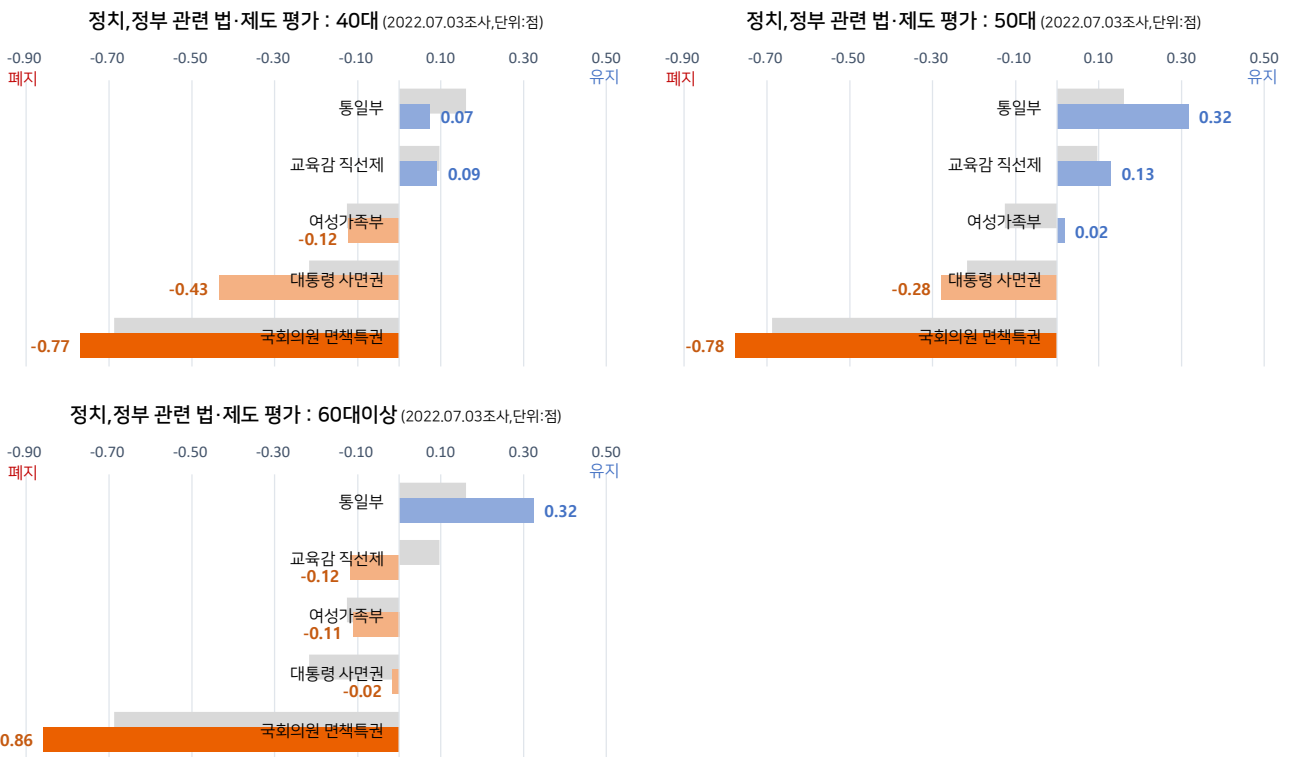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앞서 살펴본 우리사회 시스템(관례·법·제도)에 대한 2030세대의 태도는 20대와 30대 간 차이가 두드러졌으나, 정치·정부 관련 법·제도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두드러짐
  - : 이러한 차이는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남성층은 폐지 입장이고 여성층은 유지 입장임
  - : 특히 ‘여성가족부’에 대한 입장 차이는 매우 큼
- ☑ 한편, 2030세대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은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해야 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점임



## □ 4060세대, 60대 이상이 가장 부정적

- 4060세대의 정치, 정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생각 중 일치하는 지점은 ‘통일부’는 유지해야 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대통령 사면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점임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며, ‘0점’(중간이다)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푸른색 계열 막대, 낮으면 붉은색 계열 막대로 표시함
  - 또한 +0.5점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막대, -0.5점보다 낮으면 짙은 붉은색 막대로 차이를 둠
- 또한 전반적으로 60대 이상 연령층이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표함
  - 60대 이상 연령층은 ‘통일부’를 제외한 다른 법·제도들은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임
  - 이에 비해 50대는 ‘통일부’, ‘교육감 직선제’, ‘여성가족부’ 유지 의견이고, 40대는 그 중간에 위치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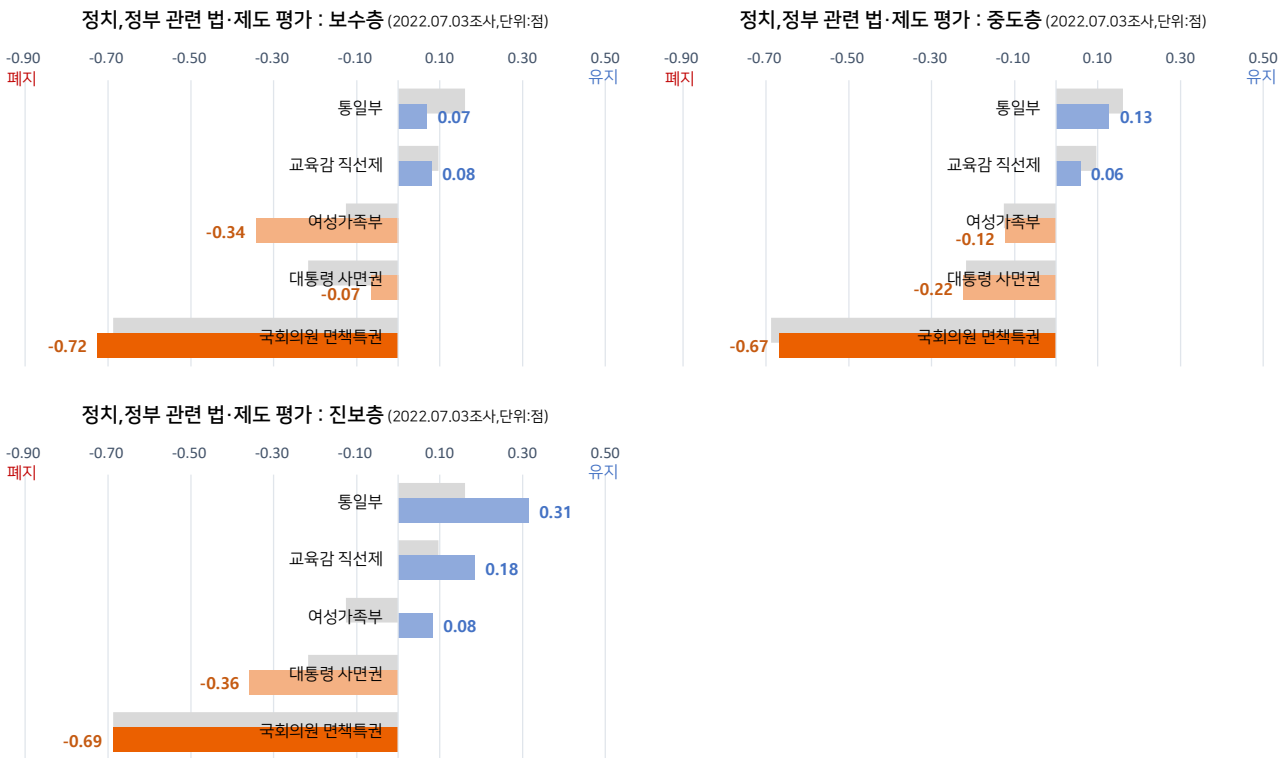


### Kstat Point

- ☑ 4060세대는 앞서의 우리사회 시스템(관례·법·제도)에 대해서는 비슷한 태도를 보였지만, 정치·정부에 대해서는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간의 의견 차이가 나타남
  - :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4060세대는 공통점이 많지만, 정치·정부에 대해서는 50대와 60대 이상이 대립하고 있음
- ☑ 한편, 4060세대 모두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음
  - : 2030세대 역시 폐지 의견이지만 4060세대 의견은 압도적으로 높아, 4060세대의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임

## □ 보수·중도층 ‘여성가족부’ 폐지 vs 진보층 유지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정치, 정부 관련 법·제도 의견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의견을 보이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만 의견이 갈리고 있음
- 보수층과 중도층은 ‘여성가족부’ 폐지 의견인데 비해, 진보층은 ‘여성가족부’ 유지 의견임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며, ‘0점’(중간이다)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푸른색 계열 막대, 낮으면 붉은색 계열 막대로 표시함
  - 또한 +0.5점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막대, -0.5점보다 낮으면 짙은 붉은색 막대로 차이를 둠
- 다른 법·제도에 대해서는 이념을 떠나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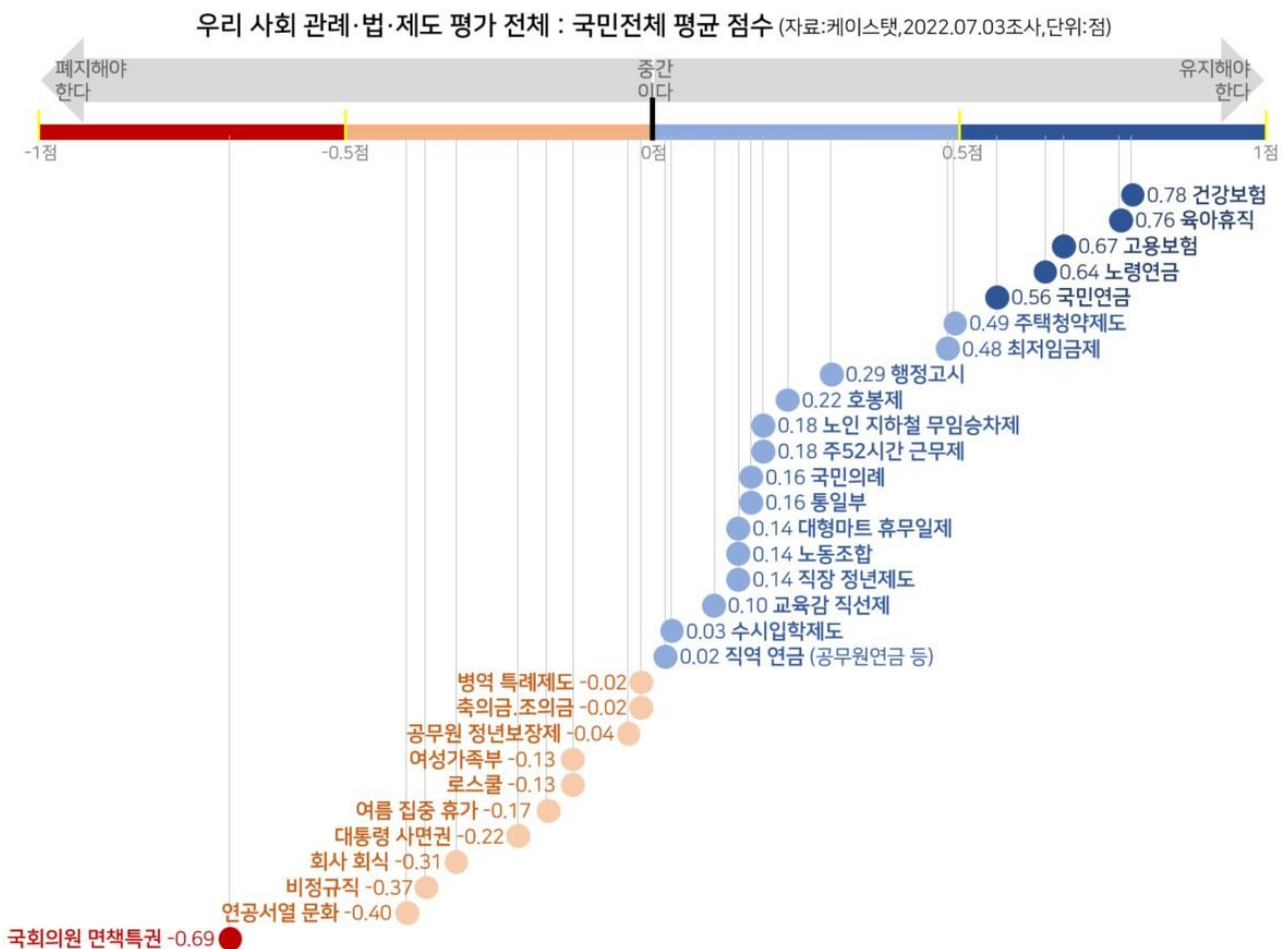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정치, 정부 관련 법·제도 중/보수층과 진보층이 대립하는 지점은 ‘여성가족부’가 유일함
  - : 향후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본격화할 경우 보수층과 진보층 간의 진영대결 양상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는 대목임
- ☑ 한편,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모두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강도 면에서는 차이가 있음
  - : 진보층이 가장 강하고(-0.36점), 중도층(-0.22점), 보수층(-0.07점) 순임
  - : 이와 관련, 최근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광복절 대통령 특사’ 가능성이 보도된 바 있음
  - : 이번 조사결과만 놓고 보면 국민여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대목임

## ※ 우리 사회 관례·법·제도에 대한 국민평가 전체

- 이번 케이스탯에서 조사한 우리 사회 관례·법·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평가 점수는 아래 그림과 같음
- 총 30개 항목 중 ‘유지해야 한다’는 긍정평가를 받은 관례·법·제도는 모두 19개이고, ‘폐지해야 한다’는 부정평가는 모두 11개임
-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항목은 ‘건강보험’(0.78점)이고, 다음은 ‘육아휴직’(0.76점), ‘고용보험’(0.67점), ‘노령연금’(0.64점) 순임
- 가장 부정적 평가를 받은 항목은 ‘국회의원 면책특권’(-0.69점)이고, 다음은 ‘연공서열 문화’(-0.40점), ‘비정규직’(-0.37점), ‘회사 회식’(-0.31점) 순이었음



- 다음 케이스탯 리포트 55호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게재할 계획임
  - 케이스탯 리포트 55호는 7월 21일(목)에 발간됨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mailto: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 [케이스탯 리포트 55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55호는 『우리사회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식 심층 분석』이라는 주제로 7월 21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7월 사회지표는 7월 14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